

# 문화

문화정책	317	미술	337
대중매체	319	음악	339
뉴미디어	321	연극·뮤지컬	342
출판	323	무용	343
광고	324	영화	344
학술	326	종교	346
과학기술	329	문화재	349
의학	333	관광	352
문학	336	패션	354

2016  
연합연감

# 문화

## 문화정책

### ■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까지 융·복합 문화콘텐츠 선순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015년 2월 문화창조융합센터에 이어 12월 문화창조벤처단지도 개소했으며 나머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구축과 운영으로 앞으로 5년간 5만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공연예술계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6월 긴급 대책에 이어 추경 예산안도 마련해 투입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계와 관광업계의 조기 정상화에 도움을 줬다.

또 한식의 세계화를 내건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에는 230만 명의 관객이 찾았다. 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04년 첫삽을 뜬지 11년 만에 공식으로 개관했다.

이밖에도 문화 분야에서는 1월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의 사표에서부터 12월 바르토메우 국립현대미술관장 임명까지 인사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됐다.

### ■ 문화콘텐츠 선순환 구조 목표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추진

정부는 2015년 2월에 2017년까지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

트 구축에 착수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유망한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할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이 사업은 2월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융·복합 문화 콘텐츠로 구체화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로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사업화하도록 도와주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열었다. 또 ▲융·복합 전문 인재 육성 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K팝 아레나 공연장도 조성된다.

이 가운데 문화창조융합센터는 2015년 한해 3만3천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다. 센터에서는 멘토링, 특강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융·복합 아이디어 기획에 일조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평가다.

문화창조벤처단지지도 1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3개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한류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콘텐츠 파크인 K-컬처 벨리가 2017년 중 완공될 예정이며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K-익스피리언스와 K팝 아레나도 2016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콘텐츠 분야 투자 확대...캐릭터·애니메이션·이야기 산업 대상

문체부는 2015년 2월 26일 문화융성을 위해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에 오는 2019년까지 총 3천800억원을 투자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세부 투자 내역은 애니메이션 분야 2천억원, 캐릭터 분야 1천300억원, 전문투자펀드 500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또 애니메이션 창작 실적에 따라 지원을 연계하는 '제작비 자동지원제' 도입, 융합콘텐츠 발굴을 위한 '애니메이션·캐릭터 융합창작센터' 구축, 캐릭터 컬래버레이션(협업) 촉진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영세성 극복을 위한 방안도 같이 내놨다.

문체부는 2015년 8월 7일 현재 1조5천억원 수준인 이야기 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5개년 중장기 계획안도 발표했다.

한류 확산과 미래 먹거리로 콘텐츠 산업의 중흥을 이루려면 이야기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체부는 전국적인 이야기 원천소재 통합 시스템의 구축과 연례행사인 '스토리공모대전'의 확대 개최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 ■ 메르스여파에 공연·관광 긴급자금 지원

문체부는 메르스 사태로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2015년 6월 12일 어려움을 겪는 공연계에 25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했다. 메르스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자 긴급하게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체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대학로 소극장에 초점을 맞춰 공연티켓 구매 시 한 장을 더 제공하는 '원 플러스 원(1+1)' 할인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또 6월 15일에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가 커진 관광업계 17개 업종에 720억원의 특별 융자금을 편성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한국관광 안심보험'도 출시했다.

메르스 대응 차원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공연예수 및 관광 분야에도 모두 7개 사업으로 총 3천206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총 2천300억원의 융자자금이 추가로 배정됐다.

또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20억원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에 46억원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95억원 ▲공연 활성화를 위한 '원 플러스 원' 티켓 지원 사업에 300억원 등이 투입됐다.

###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상승

문체부의 2015년 9월 조사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45.0%까지 상승했으며 만족도는 80.4%에 이르렀다.

11월 프로그램 수는 2천60건에 달해 행사 시작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2015년 신한카드, 이노션,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의 민간 확산에 주력했다.

아울러 기업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를 기

준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초과분까지에서 2016년부터 20% 초과분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 밀라노엑스포 한식관 200만 명 관람

한식을 주제로 하는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이 누적 관람객 목표 2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2015년 5월 1일 개막한 밀라노엑스포는 세계 3대 축전으로 불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엑스포로 10월 말까지 식량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한식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엑스포 특별 메뉴를 포함한 한식당을 현지에서 운영했다. 애초 6개월 행사 기간의 목표 관람객이 200만 명이었으나 개관 100일 만에 1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어 하루 평균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한국관을 찾아 10월 중순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6개월간의 누적관람객은 230만 명을 기록했다.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04년 첫삽을 뜬지 11년 만인 11월 25일 공식 개관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자리에 7천억원을 들여 조성된 문화전당은 문화예술 기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전체 부지면적이 13만4천815㎡(전체면적 16만1천237㎡)에 이른다.

서울 예술의전당보다 넓은 이 부지에는 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이 들어섰다.



▲ 11월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당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미 건축가인 우규승 씨가 설계한 건축물은 옛 전남도청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하 광장 형태로 조성됐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전국적으로도 최대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이나 단기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개관 직전까지 계속됐다. 이런 우려 속에서 문체부는 8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전문임기제 가급) 직무대리를 교체하기도 했다.

## ■ 잦은 문화예술계 인사 잡음과 갈등으로 진통

문화 분야에서는 주요 문화예술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 등으로 인한 잡음도 계속됐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이 2015년 1월 말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문화예술계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정식 공모에서 적임자를 뽑지 못한 채 장기간 공석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관장이 임명된데 따른 논란도 있었다.

# 대중매체

## 신문

### ■ 메르스 사태, ‘기레기’ 오명은 여전

2015년 5월 말부터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재난 보도에 있어 우리 언론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줬다. 언론은 메르스 발병 초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전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병원 비공개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이 때문에 첫 번째 감염자가 최초로 찾았던 삼성서울병원은 사태 초기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더 많은 피해를 키웠다. 이후 감염자와 병원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쟁점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추가 취재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정치 대립을 격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 살아 있는 환자를 사망했다고 보도하는 등 오보도 잇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인권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한 것이 무색했다.

### ■ 일본 산케이 서울지부 ‘무죄’와 청와대의 국민일보 광고 보복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17일 해당 기사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이 됐다는 ‘팩트’가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모 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8월 3일 기사로 다뤘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보도를 통해 2014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에 관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향간에 회자돼온 정윤희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남녀관계 의혹’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고소했고, 검찰이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자 국내외 언론 및 시민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 12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2015년 6월 16일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서울대병원 격리병동에 부착돼 있던 ‘살려야 한다’ 문구 관련 비판 기사를 썼다가 정부광고 게재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일보가 「‘살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뒤편에 A4용지… 폐복지기 초이스」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게 기사가 되느냐”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일보는 이후 정부의 메르스 광고 집행 매체에서도 빠졌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에 따르면 홍보수석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 전화로 항의한 이후 6월 18일 언론진흥재단이 광고주인 정부의 입장 때문이라며 19일 조간신문에 게재하기로 한 정부 광고를 돌연 “취소하겠다”고 알려졌다.

국민일보 측이 급작스러운 광고 취소 경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광고 집행 기관인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고 했고 김성우 홍보수석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 ■ 현직 언론인 4천713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현직 언론인 4천71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15년 11월 4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언론인들은 “역사 역행과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 불복종을 선언한다”며 “국민의 희생과 피담으로 일궈온 민주주의 저항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내고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역사를 입맛대로 기록하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에 일방적인 줄서기를 강요하는 언론장악,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노동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뿌리는 동일하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독선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오만함이 그것”이라고 비판했다.